## 다산포럼

김정남

# 내 너희에게 묻고 싶은 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나는 정치란 상충하는 국민의 권익을 공동선(共同善)의 방향으로 조정해 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더 수준 높은 정치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동체의 내일에 대한 희망을 함께 꿈꾸게 하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더 없는 보람과 긍지로 느끼게 해주는 일일 것이다.

그것까지는 언감생심 바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권익이 상반되는 양측으로부터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돌을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래도 공동선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이라고 외치는 그런 정치를 단 한 번만이라도 나는 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 정치가 국민 내부의 통합에 기여하고,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탄력을 더해주는 모습을 진정으로 보고 싶다.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꼭 기적만 같다.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는 지난 2월의 전기톱과 해머로 하여, 이제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 점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그 누구로부터도 볼 수가 없다.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 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다.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 하나는 그들의 도덕성, 역사성에 관한 것이다. 누가 나더러 개혁은 무엇으로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거침없이 개혁은 도덕성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 정의롭게 비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 앞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으며, 동서양의 옛 성현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정치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집단이 강도의 집단과 무엇이 다를 수 있으랴. 나는 30여 년에 걸친 권위주의적 군사정치문화를 걷어내고 이 땅에 다시는 정치적 밤이 없게 한, 나라의 민주화야말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정부수립에 버금가는 일대 사건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제쳐 두고라도, 문민정부는 3당 통합을 바탕으로, 그리고 국민의 정부는 유신본당과의 결합으로 출범한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민주화의 성취를 마음껏 자축하지도 못했고, 반민주를 청산하지도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민주의 이름으로 반민주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향해 "그때 너희는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고 정식으로 물어보지도 못했고, 집단적 통회(痛悔)의 시간도 가지지 못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제척(除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의는 반드시 망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적 공의(公義)를 바로 세워 놓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해방 후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것과 방불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들을 고문과 용공조작으로 처단하였던 검사, 판사, 그리고 그러한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정치인과 폭압에 협력한 언론인들이 민주화된 세상에서도 여전히 큰소리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과 그들의 자식 앞에서 그때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끝까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또 하나, 나는 그들이라면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놓고 한번쯤 밤을 새워 고뇌해 본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 울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고뇌해 본 적이 있느냐고는 물어보고 싶다. 여야 정치권이 하는 짓을 보면, 거기에는 전혀 고뇌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60년 동안, 물론 성취한 것도 많다. 정치 민주화, 근대적 경제성장, 사회문화적 다원성, 고등교육, 과학기술발전 등을 들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에서 수도권 집중률, 이혼 증가율, 자살증가율 1위요, 최고수준의 생활비지수, 최저수준의 행복지수, 국민의 상당수가 조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민 희망률 1위에 OECD 국가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다.

거기다 우리는 급격히 고령화와 다문화사회로 이동하고 있으며,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외국으로부터는 이미 성장동력이 꺼져버린,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나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나라, 심지어는 '방향 잃은 배'로까지 불리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분열과 해체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대혼란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사태는 심중하고, 갈 길은 멀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다. 갈 길을 놓고 불면의 밤을 새워 토론해야 할 지금,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사설

# 불법·비리 온상 사행성 오락실 근절하려면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아온 사행성 오락실 업주와 비리 경찰 등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지난 1월부터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오락실 업주 19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 5명 등 57명을 적발,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다.

사행성 오락실의 불법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락실과 비리 경찰의 검은 뒷거래도 되풀이되고 있다. 사행성 오락실의 불법·비리 행위는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한탕주의'에 편승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보다 각각 10배와 70%나 급증한 이번 검찰의 구속자 수와 단속 건수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사행성 오락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설령 적발이 되더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이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매월 수 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업주 입장에서는 단속이나 적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찰 등 단속 공무원과 검은 연결고리도 문제다.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뒷돈을 받아 챙기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주들은 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청소년 게임기를 변조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망을 벗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사행성 오락실이 불법·비리의 온상이 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진 사행성 오락실은 뿌리 뽑아야 한다. 일시적인 단속이나 가벼운 처벌로는 근절할 수 없다.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업주와 결탁한 공직자는 반드시 패가망신(敗家亡身)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압수수색 절차 간소화와 압수된 게임기의 신속한 폐기 처분 등을 가로막는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 정광학원 비리교사 오히려 승진이라니

교사채용 비리로 비난을 받고 있는 정광학원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2009년도 교사공채 과정에서 일부 합격자의 순위를 뒤바꾼 것도 모자라 비리에 관련된 일부 학교 관계자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정광학원의 인사채용 비리를 확인한 광주시 교육청은 학원 이사장과 이사, 정모 정광고 교장, 형모 정광중 교장(당시 정광고 교감) 등 4명을 해임하고 부당합격한 교원 6명도 합격을 취소하라고 법인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학원은 지난달 이사장과 이사를 사임 또는 해임조치했지만 교장 두 명에 대해선 징계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 오히려 형모 당시 교감은 정광중 교장으로 승진까지 한 상태다. 비리에 관여한 인사가 처벌은커녕 승진까지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러고도 어떻게 교단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단 말인가.

정광학원의 몰상식적인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학원은 징계위원회 구성도 미뤄오다 시 교육청 최종 보고 시한을 불과 5일 앞두고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게다가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도 교장 측 인사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는 이사회 고유 권한인 만큼 시 교육청의 해임요구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적당히 시간을 끌다 '없던 일'로 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정광학원은 당장 해임요구를 받은 인사들을 징계해야 한다. 그것만이 채용비리로 광주 교육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데 대해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시 교육청도 정광학원이 징계요구를 묵살할 경우 재정보조금 중단과 학급감축 등 모든 행·재정적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 사학 자체의 힘으로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면 사립학교 교사 채용권 환수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는 얘기다. 사학도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 퇴출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 NGO 칼럼

오성민

# 비영리 민간단체의 어려움

비영리 민간단체는 순수하게 회원들의 후원과 기업의 후원 그리고 단체 관계인(임원 등)의 후원에 의해서 운영이 이루어진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일부분(50~80%)만을 지원받을 뿐 한 푼도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며 당연히 지원받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당 민간단체가 부담을 해야 한다. 단 관변단체라 불리는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몇몇 단체는 운영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일반 비영리 민간단체 상근자의 급여는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 되지 않지만 각 자치 행정 단위까지(구, 군, 동) 산하 지부를 두고 있는 관변단체는 상근자의 급여가 일반 회사원 및 공무원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일반 비영리 민간단체의 상근자들은 이직률이 상당히 큰 편이며 뜻과 사명감이 없이는 버티기가 힘든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인해 몇몇 분야를 제외한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말 힘겹게 활동을 하고 있다. 뜻이 있어 후원을 하고 싶은 개인이나 기업체도 후원을 망설이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후원금을 내고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에 있다.

정치적 후원금의 경우는 15%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을 30만 원 냈을 경우 10만 원은 기본으로 세액공제가 되며 잔액인 20만 원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해 준다. 추가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의 15%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단법인체가 아닌 일반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방법도 상당히 주관적이라 지정기부금단체의 일원이 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영역과 존재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시민단체가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현실화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인의 기부문화가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후원의 상당 부분을 기업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은 후원을 받는 기업이 시민단체와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어느 기업과 후원자에게 후원을 받던 그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후원금을 낸 기업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를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 줘야 하지 않을까?

일부 후원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실 원하지 않지만 후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후원을 한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민간단체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도덕하지도 않다. 이제는 중구난방 난립해 있는 단체의 정리도 필요하겠지만 정상적인 단체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환경보전시민연대 사무처장〉

## 기고

김재욱

# 좌절하거나 용기 잃으면 예선 탈락

젊은이들 사이에 '○○폐인(廢人)'이란 용어가 유행이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고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식음을 전폐하고 그 내용에 대한 환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깊숙이 빠져있는 사람'이란 긍정적인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다.

얼마전에 끝난 제2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가 난적(難敵) 일본을 맞이해 접전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거머쥔 우리선수들의 '위대한 도전'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소득감소, 일자리부족 등으로 심신이 허약해진 국민 모두를 'WBC폐인'으로 하나되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일본과의 5번에 걸친 진검승부 중 첫 번째 대결에서 콜드패를 당했을 때의 국민들 마음은 현 경제상황만큼이나 암담했으나 김인식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은 낙담하지 않고 다음시합을 위해 착실한 전략 전술 준비와 훈련에 매진한 결과, 오히려 첫 번째 큰 패배가 선수들에게 보약이 되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지금의 경제위기가 마치 마지막까지 싸워보지도 못하고 7회에 콜드패를 당한 상황일 수 있지만, 여기서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게 된다면 예선탈락이란 참담한 결과뿐일 것이다. 정부와 광주시 및 유관기관 그리고 우리자신 스스로를 믿고 위기상황에 맞서 그 이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때마침 정부는 지난달 24일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5대중점 분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4조 2000억),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조 5000억),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4조 5000억), 지역경제 활성화(3조),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2조 5000억)이다.

경기침체속에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주로 서민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세부대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의지에 따른 금융소외자(노점상 및 저등급 신용자가 대상)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폭적인 보증지원으로, 당초 1천억, 5천억에서 각 1조2천5백억, 2조7천억원으로 증대되었다.

우리 재단에서도 직원 모두가 보증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니, 노점상 및 저신용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주저하지 말고 지금 활짝 열린 재단의 문을 두드리기를 희망한다. 특히, 금융소외 대상자들은 불법적인 고금리의 사채시장이 아닌 금융권을 통한 보증부대출이 가능하므로 자포자기 하는 일 없이 현 경제위기와 그 이후를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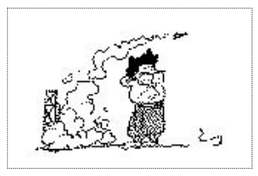
아직도 나의 마음속엔 일본 도쿄돔에서부터 LA다저스경기장까지 '우린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선수단과 TV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쥔 우리국민들의 희망찬 모습을 회상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란 확신이 든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無等鼓

# 로켓

지난 5일 북한이 대포동 2호 로켓을 쏘아올려 지구촌이 시끄럽다. 북한은 로켓에 실린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방에서는 로켓발사를 북의 '무력시위'로 보고 있다.

많은 사람은 로켓이 주는 어감이나 과학적 구조 때문에 서방세계의 산물로 생각하지 쉽지만 그 연원은 동양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40년께 저술된 중국의 '무경총요'(武經總要)에는 원시 로켓 제조법이 기록돼 있다. 책에는 숯·초석(硝石)·황 등을 혼합해서 만든 흑색화약을 에너지원(源)으로 해서 굵은 대나무 통에 채워 넣고 화살촉이 붙은 가느다란 대나무에 묶어 대형의 화살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이 바로 로켓의 원천인 화전(火箭), 즉 불화살이다.



화전제조 기술은 인도나 아라비아를 거쳐 유럽에 전해졌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쏘아올리는 불꽃을 뜻하는 '로케타(rocchetta)'라 불렀고, 이것이 오늘날의 로켓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1448년(세종 30년) 고려 말기 최무선이 제조한 로켓형 화기(火器)인 주화(走火)를 개량해 여러 종류의 신기전(神機箭)이 만들어졌다. 신기전은 본격적인 추진체의 원리를 적용했다는 점을 들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병기로 간주할 수 있다.

현대적인 로켓은 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미국의 R.H.고더드가 미 육군의 지원을 받아 1926년 3월 16일 매사추세츠주(州) 오번에서 사상 최초로 액체 추진제를 사용해 발사에 성공했다. 이후 로켓은 눈부시게 발전해 사람들의 달나라 왕래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로켓은 핵탄두를 싣고 6천~7천㎞를 날아 인류를 대량살상할 수 있는 '흉기'의 얼굴도 지니고 있다. '벼랑 끝 전술'의 달인인 북한 입장에서는 대미협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인민들의 배를 불리는 게 로켓 발사보다 급선무로 보인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 생명 위협하는 '가짜 휘발유 거래' 뿌리 뽑아야

C발유란 유사석유를 포장한 이름이다. C발유라는 이름이 생긴 이유는 예전에는 '세녹스' '알코올석유' '유사석유'라는 식으로 판매를 하다가 이게 단속에 자주 걸리다 보니 인터넷에 C발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유사석유 판매는 불법이고 문제가 크다.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폭발이나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 판매 때문에 사이트 단속도 강화되고 경찰의 수사도 늘어나니 요즘은 유사석유제품 동호회까지 만들어 은밀히 거래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시너를 '물'로 표현하는가 하면, 휘발유를 'C발유'로 부르는 식의 은어가 그런 사례라 하겠다. 거기다가 단속시간을 회피하기 위한 야간, 새벽 및 공휴일 판매, 이동제조차량을 이용한 게릴라식 판매 등 다양한 불법영업을 하고 있을 정도라니 놀라운 일이다.

자기 자신의 차량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단속을 요망한다.

▲홍예서·광주시 광산구 두정동

# 무겁고 겉치장만 신경쓴 아동전집 자원·돈낭비

아이에게 책을 사주기 위해 서점에 들렀다. 책들은 출판사마다 책표지나 재질이 각양각색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공통점이 단순 동화책인데도 하드커버 전집으로 바뀌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예전에 영국에 갔을 때 경험한 것은 어린이 동화책이 전부 다 낱권 구매가 가능했다. 또 책 안의 종이도 가벼운 모조종이로 만들어져 값도 쌌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화책은 전집 위주로 판매되고, 또한 가벼운 모조종이로 만들어지는 외국 동화책에 반해 무거운 아트지로 만들어 놀랍게도 책의 무게가 외국 동화책에 비해 최대 7배가량 무거웠다.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하드커버에 아트지로 만든 동화책과 작은 커버에 모조종이로 만든 동화책을 같은 페이지로 같은 부수를 찍었을 때, 하드커버의 원가가 3~4배 이상 높다고 한다. 장사꾼들의 잇속만 챙기는 이런 책은 하루빨리 퇴출시키고 모조지로 가볍게 만들어 주며 그것도 낱권으로 살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김성희·광주시 남구 도금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 | | | | | |
|---|---|---|---|---|---|
| 편집국안내 | | 사회2부 | 2200-692 | 경영지원국 | 2200-511 |
| 〈대표 FAX | 222-4918〉 | 〈FAX | 227-0118〉 | 〈FAX | 222-8005〉 |
| 편집부 | 2200-672 | 문화생활부 | 2200-661 | 광고마케팅국 | 2200-521 |
| 정치부 | 2200-634 | 여론매체부 | 2200-679 | 〈FAX | 227-9500〉 |
| 경제부 | 2200-641 | 체육팀 | 2200-663 | 디자인 | 2200-536 |
| 사회1부 | 2200-612 | 사진부 | 2200-691 | | |
| 〈FAX | 222-4267〉 | 조사부 | 2200-571 | | |

| | |
|---|---|
| 문화홍보국 | 2200-541 |
| 〈FAX | 222-0195〉 |
| 독자서비스국 | 2200-551 |
| 〈FAX | 227-9500〉 |
| 서울지사 | 02-773-9331 |
| 〈FAX |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